

2026년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문제지

성명	
----	--

수험번호	
------	--

1. 문제지 상단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만 마킹하시기 바랍니다.
3.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 출마유형」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답안 작성 시 연필, 볼펜 등을 이용한 예비 마킹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필기구 성분에 따라 답안으로 인식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문제지에 필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별도의 연습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수정테이프 및 계산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 답안을 잘못 기재한 경우,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의 답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7. 질문이 있는 경우,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 소리를 내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8.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이 절대 불가하며, 위반 시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9. 감독관 확인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 처리되므로,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는 모두 반납하여야 합니다.
 - ※ 문제지를 유출하거나 문제 또는 답안을 별도로 기재하여 반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엄격히 금지됩니다.
 - ※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내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WARNI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시험지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또는 동의 없이
촬영, 복사, 전재, 배포, 공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다음 중 당 기구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점)

- ① 상임전국위원회는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헌·당규·윤리규칙·윤리강령의 최종적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다.
- ② 최고위원회의는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청년최고위원 1인, 지명직 최고위원 1인,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된다.
- ③ 전국위원회 의장은 전국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고, 전국위원회 의장은 전당대회 의장과 상임전국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한다.
- ④ 상임전국위원은 당 대표,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사무총장 등 중앙당 당무집행기구 산하 당직을 겸할 수 있으나, 시·도당 위원장직은 겸할 수 없다.

2.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당헌을 개정할 경우, 이에 대한 추인 절차로 옳은 것은? (4점)

- ① 상임전국위원회가 당헌·당규의 최종적 유권해석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추인한다.
- ② 최고위원회의가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 기관이므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인 절차가 완료된다.
- ③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의 기능을 적법하게 대행한 것이므로, 별도의 추인 절차 없이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점)

- ① 운영위원회의 기능에는 전당대회 대의원의 선임, 시·도당대회 대의원의 추천, 시·도당 위임·요청사항의 처리 등이 포함된다.
- ② 읍·면·동 운영위원은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직접 임명하며, 읍·면·동별 유권자 수와 관계없이 각 1인을 선임한다.
- ③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임기 종료 시까지이다.
- ④ 당원협의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조직된다.

4. 당 윤리위원회 규정상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한 징계 특례 내용으로 옳은 것은? (4점)

- ① 기소된 자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명 이상의 징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기소되더라도 1심 판결 전까지는 모든 당직과 피선거권이 유지된다.
- ③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응모자격이 정지된다.
- ④ 징계특례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는 무죄 판결 전까지 징계처분 취소 또는 정지가 불가능하다.

5. 이승만 정부의 토지개혁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토지개혁은 6·25 전쟁 발발 등으로 인해 매우 극소수의 농민에게만 토지가 분배되어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
- ②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개혁법 통과 이후부터 행정 준비를 시작하여 실제 토지분배에는 오랜시간이 소요되었고 1955년 춘경기에 맞추어 토지 분배가 시작됐다.
- ③ 토지개혁으로 인해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갖게 됐고, 6·25 전쟁 초기 북한 공산당의 토지 무상분배 선동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 ④ 북한 역시 남한과 유사하게 유상몰수·유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실시 하였으나, 남한보다 개혁 시기가 늦어 정치적 효과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6. 이승만 정부의 주요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승만 대통령은 인민공화국 주석 취임을 거부하고 1945년 10월 23일 좌우익을 포괄하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② 국가보안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직후인 1948년 12월에 제정되었고, 위기의식을 느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초당적으로 입법되었다.
- ③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을 통한 협상력으로 이끌어냈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안보의 기틀이 되었다.
- ④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사람의 절대적인 부의 수준이 동일하고 평등하게 사는 체제 확립하기 위해 교육입국 정책을 펼쳤다.

-
7.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박정희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민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시켰으며,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다. 또한 저축 권장과 고금리 정책을 통해 절약·저축 풍토를 정착시켜 경제성장의 자본을 마련하였다.
 - ② 박정희 정부 재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3%대로, 같은 기간 일본 등 외국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부족했다.
 - ③ 박정희 정부는 경공업 중심의 내수형 경제를 기반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출액이 4천만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 ④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제공 받고, 일본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하였다.

8. 김영삼 정부의 정책과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김영삼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무노동·무임금 도입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였다.
 - ② 김영삼 정부 임기 중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하였다.
 - ③ 김영삼 정부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협력해 출범시킨 정부로 금융실명제와 같은 개혁을 통해 정치와 경제의 건전성을 높였다.
 - ④ 김영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했다.

9. 다음 중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②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제도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과 긴장관계에 있고, 경우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 ③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검열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 ④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도 있다.

10. 다음 중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 하여야 한다.
- ②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지만 최종 확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 ④ 행정부는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을 만들 수 있지만, 국회의 입법 취지와 상위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

11. 다음 중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
 - ③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④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2. 다음 중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③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 ④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한다.

13. 다음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A)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3점)

누구든지 (A)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 ②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 ③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 ④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14. 다음 중 선거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240일부터는 직접 배부하는 경우에 한해 모든 규격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 ② 평상시에 동보통신을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 ③ 평상시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④ 군의 지역구회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15. 다음 중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시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③ 방송국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언제라도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16. 다음 중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②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와 무관한 경우 기부행위가 가능하다.
- ③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④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모임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매수죄에 해당된다.

17.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3점)

-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① 5개 ② 4개
- ③ 3개 ④ 2개

18. 다음 중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직자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즉시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구두로도 가능하다.

19. 다음 중 금품 등 수수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선물 증정 가능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며 축의금·조의금을 합산한 경우에는 10만원을 넘을 수 있다.
- ④ 증여, 무이자 소비대차 등을 제외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상 5대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더라도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공직자는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④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과 수익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생산자가 1명 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21. 한미동맹의 현대화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으로서의 본질을 유지해야 하며, 기술·경제 분야의 협력은 필요하지 않다.
- ②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기술·경제·우주·해양을 아우르는 21세기형 전략동맹으로 진화해야 하며, 양국 국민에게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플러스 외교가 필요하다.
- ③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여 미국의 안보 공약과 이익에 부합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④ MASGA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산업의 독자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한미 간 기술이전보다는 한국 내 자체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2. 한중관계의 저해 요인과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한중관계 악화의 주된 원인은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 심화로 인한 경제적 갈등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상협정 개정이 최우선 과제이다.
- ② 한중관계는 정부에 따라 바뀌지 않는 일관된 외교원칙이 필요하고, 상호 존중과 호혜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 ③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간 안보 현안에서 중국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유연한 외교 노선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 ④ 국내 반중감정은 주로 언론 보도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실제 정부 간 외교에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23.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 (3점)

- ① 국가보안법
- ② 출입국관리법
- ③ 재외동포법
- ④ 대한민국 헌법

24. 과학기술 및 원자력 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과학기술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② 전통적인 군사, 경제의 틀에서 기술 패권 경쟁으로 외교의 축이 이동하는 중이다.
- ③ 원자력 외교에 있어서는 과학의 정치화를 통해 정권마다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위험이 잠재된 원자력 에너지 활용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기술 표준을 누가 정하는지, 공급망을 누가 장악하는지가 국제질서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25. 북한 체제의 본질과 이념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북한의 이념은 사회주의에서 주체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변모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실상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 체계이다.
- ② 북한 체제의 본질은 ‘삼권 분립’, ‘유일영도체제’, ‘전원합의체제’이다.
- ③ 북한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가 활동은 국무위원회의 영도 하에 운영되며, 조선노동당은 자문 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④ 북한의 의사결정 구조는 노동당-정부-인민군 간 합의에 기반한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된다.

26. 6·25 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3점)

- ① 1951년 3월, 소련의 스탈린 사망을 계기로 휴전 회담이 개시되었다.
- ②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에 수행된 작전으로 6·25 전쟁의 전황을 바꾸었다.
- ③ 전쟁 발발 전 스탈린과 김일성은 북침 계획을 확정하고 합의했다.
- ④ 정전협정은 UN군, 북한군, 중공군, 한국군이 모두 서명 당사자로 참여하여 체결되었다.

27.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과 주요 사건의 연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김영삼 정부 : 제2연평해전 발발
- ② 김대중 정부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 ③ 이명박 정부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
- ④ 박근혜 정부 :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28.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 관련 조항과 대북정책의 교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 ② 헌법 전문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며,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대한민국은 통일이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헌법 정신에 위배되거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방향의 통일정책이라도 펼칠 필요가 있다.
- ④ 헌법 제5조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명시되어 있다.

29. 산업혁명의 단계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전환을 통해 대량생산 시대가 열렸다.
- ②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후반부터 전개되었으며, 컴퓨터와 반도체 기술의 발전이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 ③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 전기의 상용화와 내연기관의 발명을 통해 대량생산 체제가 확립된 시기이다.
- ④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단계로, 디지털 영역에 한정된 기술 혁신이 특징이다.

30. AI(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현재의 AI는 강인공지능 단계에 해당하며, 인간 수준의 범용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다.
- ② 약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로, 음성인식·이미지 인식·번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 ③ 강인공지능은 인간을 초월하는 수준의 AI를 의미하며, 먼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 ④ 챗GPT와 자율주행차는 초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31.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하고 녹색기술 R&D 투자,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였다.
- ② 이명박 정부 시기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신속한 재정 투입으로 경기를 부양하였으며, 한-미 FTA 비준과 한-EU FTA 발효가 이루어졌다.
- ③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기치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설립하고, ICT와 전통산업의 융합을 촉진하였다.
- ④ 박근혜 정부의 주요정책으로는 과학기술처의 위상 강화, G7프로젝트가 있다.

32. 디지털 전환 시대에 보수정당이 개선해야 할 소통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플랫폼별 특성을 이해한 맞춤형 콘텐츠 및 숏폼 활용
- ② 전통적 조직 중심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평적 구조 도입
- ③ 신문 등 메시지 통제력이 높은 소통 방식을 최우선으로 전략 설계
- ④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 위주에서 양방향 소통 강화로 전환

「2026년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가 종료되었습니다.
(총 32문항)

수고하셨습니다.

